



빈백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학우들 지난달 30일 제38대 총학생회 '연'이 주최한 '연두데이' 행사가 학술정보원 옆 잔디밭에서 열렸다. 위 사진은 행사 현장의 빈백과 돗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학우들의 모습이다. 김예린 기자 moondarae@

주요기사	
 사회보도 >2면	입시의 장, 새로운 잣대 세워지다
 학술 >3면	저궤도 위성 급증, 관리 부재의 하늘
 찬반토론 >4-5면	학우가 말하는 주 4.5일제
 만남 >8면	세상을 해석하는 힘 국어국문학과

가입은 돼 있지만 정보는 없다, 재학생 보험의 낮은 접근성과 그 이유는

학생 자치 규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현재 우리 대학은 과대보상 및 허위신고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홈페이지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안내만 게시하고 있다. 재학생 보험은 대학 등록과 함께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내국인 재학생은 본인의 보험 가입 현황이나 보장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 대학 보험 내용은

대학 보험은 ▲구내의 치료비 ▲대물배상 ▲대인배상 ▲상해·사망 및 후유 장애 보장으로 구성된다. 대물배상은 교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제도이며 대인배상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 한편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국인유학생보험보상안내'에는 ▲보상 제외 항목 ▲보

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 청구 서류 ▲상해·질병 외래치료 및 처방치료 의료비 ▲상해·질병 입원치료 의료비 등에 대한 정보가 설명되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상해·질병 외래(통원) 및 처방치료는 총병원치료비에서 1일 최대 20만 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고 입원치료비는 상해와 질병 각각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된다.

현재 상명대학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부 대학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재학생 보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상명대학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청구 방법 등을 제시한다. 서울대학교는 ▲계약기간 ▲보상 한도액 ▲보험명 ▲보험사 등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전남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등은 우리 대학과 같이 보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보장 내용 공개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 고려”

본지는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재학생 보험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구글 폼 활용)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광개토관, 집현관, 학생회관에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현재 우리 대학이 제공하는 보험 관련 정보 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 100명 중 65명(65%)이 '만족하지 않는다' 혹은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험 안내 시 알고 싶은 정보로는 ▲보장 항목 ▲청구 절차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순으로 언급됐다.

이에 대해 학생지원처는 재학생 보험이 교육부의 의무 지정 제도는 아니라며 "학생들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장 내용이 공개될 경우 타 대학과의 단순 비교로 논란이 발생하거나 보험 계약상의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 향후 계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보 공개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과대보상과 허위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차원에서 공제 제도에 대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보험비용이 증가하면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정보 비공개 취지를 인지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학생지원처는 "학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 행사나 캠퍼스 생활 중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 발생 시 학생지원처로 문의하면 보상에 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예린 기자 moondarae@
양수영 기자 suyoung@
▶7면으로 이어짐

지난달 10일 진행된 2025학년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제38대 총학생회 '연'(이하 총학생회)은 하반기 예·결산안과 함께 회·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세칙은 학생 자치의 근간이 되는 규정이나 개정 이후 게시된 공지는 학우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낮은 관심도 보이는 학생 자치 활동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회·세칙 개정안에 대한 우리 대학 학우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구글 폼 활용)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광개토관, 총무관, 학생회관에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지난달 10일 우리 대학의 회·세칙이 개정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라는 물음에 응답자 130명 중 117명(90.0%)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또한 '우리 대학 회·세칙 개정안의 접근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물음에는 응답자 102명 중 88명(86.3%)이 '그렇지 않다' 혹은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안내 부족 ▲학우들의 관심 저조 ▲복잡한 경로 순으로 언급됐다.

한편 지난달 15일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세칙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기준 조회수 10을 넘지 못했다. 이번 회·세칙 개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한 전지영(물리전문화·19) 학우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외에도 예브리타임이나 교내 게시판 공지를 병행하

면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은 우리 삶의 일부인 만큼 학우들이 학생 자치에도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불일치 조항 바로잡은 회·세칙 개정

이번 회칙 개정은 조항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선거 제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종승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은 "총학생회 회칙의 일부 조항이 선거시행세칙과 일치하지 않아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 회칙 제102조 제4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일을 기존 '후보자 등록 마감일 20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변경했다.

선거시행세칙은 '선거 투표 권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자격 박탈 기준을 경고 3회로 통일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전학대회에서 후보자 박탈 기준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속의 끝에 3회 통일로 결정됐다"며 "징계 기준의 일관성을 통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총학생회는 개정안 상정 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초안을 논의하고 총학생회 홈페이지 개정예고 내 구글 폼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회·세칙의 양이 방대해 일반 학우가 관심을 갖기 어렵다"며 대표자 역할을 강화해야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수 있어 작년 전학대회부터 대표자 의무강화안을 발의해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자치기구는 학우의 관심이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
배서현 기자 Hyeonee@
박혜빈 수습기자 been423@

2025 [세종 서평 공모전]

<p>◎ 제출 방법</p> <p>매월 2권, 총 6권 (기준: 1권당 250쪽)의 책을 읽고 서평 공모전 포스터의 URL 및 QR코드를 통해 서평 쓰기를 작성하면 제출 완료</p>	<p>◎ 일정 안내</p> <p>운영 기간: 9월 1일~11월 30일 (3개월간 진행)</p> <p>선정자 발표: 12월 첫째 주</p>	<p>◎ 유의사항</p> <p>1) 서평에 부합하지 않는 글의 경우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p> <p>2) 선정된 서평은 학술정보원 2층 미디어월을 통해 공개될 예정</p>
--	--	--

사령 노민호(바이오융합공학·23) 박혜빈(경영학·20)을 수습기자로 임명함

대학 단신

국내 대학 중 상위 1% 논문 비율 1위

지난달 27일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한 '2013-2023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 실적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대학이 지난 10년간 발표한 SCI 논문 중 2.93%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는 국내 대학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임종화 총장은 "앞으로도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학문 생태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美 노스럽그루먼 싱크탱크 연구소로 지정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에서 우리 대학이 미국 방위산업체 노스럽 그루먼(Northrop Grumman Corporation)과 산학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 대학 우주항공 산업연구소(Aerospace Industry Research Institute)가 공식 싱크탱크 연구소로 지정됐으며 향후 ▲산업 네트워크 구축 ▲정책 및 기술 협력 ▲한-미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며 국내 전략 거점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이관 노스럽 그루먼 한국 지사장은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항공우주 분야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2025 지능형 수중감시 핵심기술 발전 워크숍' 개최

우리 대학이 지난달 23일 대한민국 해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 해군 과학기술학회와 공동으로 '2025 지능형 수중감시 핵심기술 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AI 기반 차세대 수중감시 기술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산·학·연·군이 협력 전략을 모색했다. 또한 센서 기술, 표적 탐지·식별 등 여러 첨단 기술 연구들이 소개됐다. 특화연구센터 홍우영 센터장은 "해양은 전략적 주권이 걸린 핵심 영역인 만큼 협력을 통해 AI 기반 차세대 해양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실질적 협력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대신문

발행인	임종화	주간교수	고영대	간사	최지훈
편집국장	박혜린	교육부장	배서현	기획1부장	이재원
기획2부장	양수영	홍보부장	김예린	총무부장	김진영
대표전화	02) 3408-3114				
신문사	02) 3408-3352				
대표메일	press@sejong.ac.kr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신문사 (학생회관616호)				

독자 모니터링

칼날이 골고루 갈려 있어야만 한다



김태연(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21)

707호는 이전 호들과 비교했을 때 기사 구성과 주제의 깊이 면에서 다른 인상을 줬다. 정확한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706호와 707호 간의 발간 간격이 짧았던 만큼 세종대신문이 늘 보여주던 날카로움과 촘촘한 구성이 이번에는 고르게 퍼져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면은 완벽했다. 신문의 첫 페이지로서 가장 공문화되어야 할 주제를 정확히 짚어냈다. 특히 계열·자유전공 학부 신입생 투표권 문제는 학우의 기본권과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PBL 강의는 우리 대학이 오랜 기간 시행해 온 강의 방식이지만 여전히 다양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학우의 견을 드러낸 것이 의미 있었다.

2면에서는 교내 장학금과 지방 대학 문제를 다뤘다. 교내 장학금 운영과 관련된 기사는 학우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는 주제이기 시의적절했다. 설문조사와 자료를 함께 활용한 점도 기사에 논리적 완성도를 더했다. 다만 지방 대학 관련 기사는 '대

학신문'이라는 정체성을 고려했을 때 다소 거리감이 느껴졌다.

3면의 기획 면은 팝업스토어를 다루며 주제 선정과 구성 면에서 돋보였다. 20대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인터뷰와 전문 자료를 통해 기사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4·5면 특집 면은 시각적인 즐거움이 컸다. 다양한 수상작과 설명이 흥미로웠지만 수상 기준이나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보완됐다면 더욱 풍성한 구성이 됐을 것이다.

6·7면 세종마당 면은 독자와의 소통이 살아 있는 지면이었다. 사실과 칼럼에서 기사 개개인의 시선과 생각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어 읽는 내내 공감할 수 있었다.

반면 8면 만남 면은 시의성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기사 구성은 좋았으나 호텔관광경영학과 소개가 이 시점에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계열·자유전공학부 학우들의 전공 선택권이 남아 있기에 충분히 다룰 만한 소재이기는 하나 9월보다는 3월 입학 시점에 게재됐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707호는 탄탄한 구성을 유지했지만 몇몇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칼날도 오래 쓰면 무더지기 마련이다. 세종대신문이 그간의 날카로움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하며 대학신문의 기수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을 잇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학의 청년 특화 고용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돼 전국 121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우리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운영 현황과 주요 성과를 살펴봤다.

"학생 눈높이에 맞춘 진로·취업 지원 위해 노력할 것"

우리 대학 사업단은 고용노동부, 광진구와 연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진로 탐색 및 설계부터 실전 취업 준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취업의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학년별 특성에 맞춰 미래 직업 교육과 실질적인 취업 스킬 향상을 위한 취업

교육 및 교육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졸업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교육을 지원한다.

사업단은 진로·취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진로취업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진로취업지원센터 육효구 센터장(이하 육 센터장)은 "졸업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이 특히 높은 만족도와 참여율을 보인다"며 "실제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과 경험을 들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담직원제를 바탕으로 학생과 기업을 연결하는 추천 채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육 센터장에 따르면 진로취업지원센터는 고용시장의 경력직 선호 및 수시 채용 확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방문 프로그램 활성화 ▲실무 중심 교육 강화

▲현직자 멘토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단 프로그램이 취업 준비 과정에 도움돼"

사업단의 자기소개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권혜경(경영학·20) 학우(이하 권 학우)는 "자기소개서의 핵심 구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권 학우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 직군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언급했다. 다만 "사업단의 프로그램을 모르는 학우가 많다"며 "수업 연계형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단국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일부 대학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로·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단국대학교는 학생이 자기주

도적으로 역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영웅스토리(Young Story)' 시스템을 운영해 졸업생의 취업 현황과 입사자의 대외활동, 자격증, 학점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진로본부는 ▲모의면접 컨설팅 ▲직무체험 프로그램 ▲취업특강을 제공하며 면접 연습이나 역량검사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잡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숭실대학교는 진로취업프로그램과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기업 채용설명회 ▲채용전략 원포인트 특강 ▲현직자 산업 특강 등을 통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깨움-기움-이룸-이음'의 4단계 맞춤형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재원 기자 jaewonii@
김예린 기자 moondarae@



2025 제7회 학정포럼 지난 6일 학술정보원 2층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제7회 학정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에너지융합학과 전이찬 교수가 '기후변화 시대: 기후 위기인가? 우리가 위기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재원 기자 jaewonii@

사회보도

학폭 기록 2026 대입 전면 반영, 공정성과 사법화 논란 맞붙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이하 학폭) 조치 사항이 모든 수시·정시 전형에 의무 반영된다. 지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방침이다. 그러나 의무 반영 이전인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일부 대학이 학폭 처분을 받은 학생의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하기도 하면서 과잉 처벌 논란과 함께 법적 분쟁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대입 전형 전반으로 확대된 학폭 기록 반영

학폭 조치 사항 반영 논의는 지난 2023년 발생한 정순신 변호사(이하 정 변호사)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로 지명된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으로 강제전학 조치(8호) 처분을 받고도 정시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확산됐다. 이에 교육부는 같은 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대교협은 대학이 각 전형별로 학폭 조치 사항 반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

며 ▲지원자격 제한 ▲총점 감점 ▲총점 0점 처리 등의 조치가 허용됐다.

우리 대학 대입 전형에도 변화가 생겼다. 예체능특기자 전형에만 적용되던 학폭 조치 사항 반영이 2026학년도부터 모든 수시·정시 전형으로 확대된다. 학생부교과 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은 비롯해 학생부종합의 ▲국방AI로봇융합공학 ▲국방AI융합시스템공학 ▲사이버 국방 특별전형은 학폭 조치 후수와 상관없이 지원이 불가하다. 정시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돼 학폭 기록이 있는 지원자는 감점 처리된다.

학폭 조치 반영의 명과 암

학폭 조치 사항의 대입 반영은 명확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교내 징계를 넘어 대입 불이익이라는 실질적 제재를 통해 폭력 행위의 결과를 분명히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둘러싼 부작용과 회의적 시각 또한 적지 않다. 서면사과(1호)나 접촉금지(2호) 등 경미한 조치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학폭 조치의 기

준이 학교마다 달라 동일한 행위에 대한 처분 편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여기에 학폭 신고를 당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되려 신고하는 맞장 문제도 논란을 키운다. '전국 17개 교육청 학교폭력 접수 건수와 쌍방 신고 건수' 통계에 따르면 맞쪽 등으로 쌍방신고가 접수된 사안은 2022년 3,092건에서 2023년 3,588건으로 약 16% 증가했다.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학폭 전문 변호사 광고가 증가하며 학폭 문제가 교육의 영역을 넘어 사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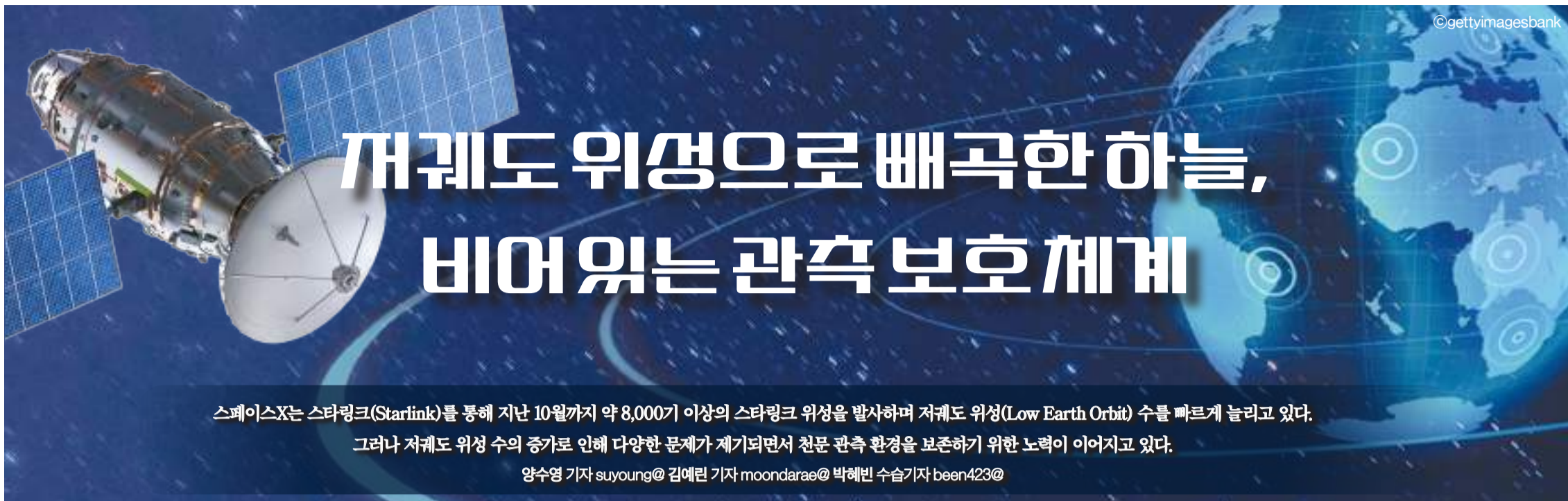
"실효성 높으려면 비례·절차 예방 중심 보완 필요"

법학과 김용현 교수(이하 김 교수)는 학교마다 학폭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달라 편차가 큰 것에 대해 "교육부가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진행해 절차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징계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에 대해 이의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해야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이어 "불복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도 징계 과정의 공정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대입 불이익만으로는 학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피해 학생의 회복 지원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예방 중심의 교육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학과 이재교 교수(이하 이 교수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처분의 경중에 따라 불이익을 차등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미한 조치까지 동일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사건의 성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의 학폭 행위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교육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기에 권리 침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
이재원 기자 jaewonii@
노민호 수습기자 vvidee@
▶ 7면으로 이어짐



저궤도 위성으로 배곡한 하늘, 비어있는 관측 보호 체계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Starlink)를 통해 지난 10월까지 약 8,000기 이상의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하며 저궤도 위성(Low Earth Orbit) 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그러나 저궤도 위성 수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천문 관측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양수영 기자 suyoung@ 김예린 기자 moondarae@ 박혜빈 수습기자 been423@

저궤도 위성확대와 전문 관측의 충돌

저궤도 위성은 약 300~2,000km 고도에서 공전한다. 이는 적도 상공 약 3만 6,000km에서 공전하는 정지궤도 위성보다 낮은 고도에 위치해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이 짧고 신호 세기가 강하다. 또한 여러 위성이 군집 형태로 운용돼 음영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궤도 위성은 위성 기반 인터넷 망 구축과 6G 상용화를 앞둔 세계 기술 경쟁 속에서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6G 시대에는 지상 네트워크와 위성 네트워크를 통합하는 하이브리드 통신 구조를 채택해 초고속·초저지연 통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우주전파관측망(Korean VLBI Network, 이하 KVN)은 전파천문학 연구를 위해 구축된 초장기선 전파간섭계**를 이용해 블랙홀이나 은하핵 등 천체에서 방출되는 미세한 전파 신호를 관측한다. 그러나 KVN의 일부 수신 대역***이 저궤도 위성의 통신 주파수와 겹칠 가능성이 있다. 주파수가 중첩되면 KVN의 수신기가 특정 천체의 신호를 오인하거나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해 관측 정확도가 저하될 수 있다. 지난 7월 호주 커틴대학교(Curtin University)의 연구진은 서호주 머치슨 전파천문관측소의 Engineering Development Array 2를 통해 약 1,806기의 스타링크 위성

로부터 총 11만 2,534건의 전파 방출 탐지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일부는 전파천문학 보호 주파수대에서도 관측돼 일부 위성이 과학 관측 대역에 간섭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저궤도 위성의 광해 문제는 상업용 위성의 표면이 태양광을 반사해 광학 망원경의 관측 데이터를 오염시키며 발생한다. 칠레 베라 C. 루빈 천문대(Vera C. Rubin Observatory)에서 진행 중인 우주와 시간 유산 탐사(Legacy Survey of Space and Time, LSST) 프로젝트에서는 다수의 스타링크 위성이 광학 망원경 관측 이미지 촬영 중 빛의 궤적을 남긴 현상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측 이미지의 상당수가 위성 궤적에 의해 손

상됐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전체 이미지의 약 30~40%가 과학적 분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저궤도 위성망은 사이버 공격의 새로운 표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스타링크가 채택한 '저궤도 위성 컨스텔레이션 네트워크(LEO Satellite Constellation Networks, LSCN)'는 지상망보다 높은 주기성과 규칙성을 가져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쉽다. 위성의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전기 동력 시스템(Electric Power Steering, EPS)에 DDoS 공격이 가해지면 전력력이 소모될 수 있고 유도항법제어(Guidance, Navigation, and Control, GN&C)가 공격받으면 내비게이션 체

계가 마비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저궤도부터 정지궤도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음영지역(陰影地域): 전파가 장애물이나 지형 등의 영향으로 도달하지 않거나 약해지는 지역
**초장기선 전파간섭계(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 VLBI): 전파망원경 여러 대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뜨려 기선(선간)을 극대화하고 하나의 망원경처럼 사용해 고해상도 천체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수신 대역: 수신 장비가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

저궤도 위성의 궤도적 대응 방향

스타링크의 본격적인 국내 서비스 개시에 따라 우리나라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가 집중 감시체계에 돌입했다. 해당 센터는 정지궤도 위성망의 전파 간섭 여부를 감시하며 Ku 밴드 주파수(12~18GHz)를 관측할 수 있는 감시 5국을 활용해 하루 25~30회 추적 및 야간 고정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저궤도 위성이 이미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대응 체계는 여전히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비되지 못한 상태다. 일본은 스타링크 서비스 도입 전 단계에서 전파 간섭의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비스 도입 허가가 선행된 뒤 관련

연구가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스타링크 코리아와 스페이스X 간 공급 협정을 승인했으며 위성 운용이 우리나라의 전파 환경과 보안 체계에 초래할 영향을 검토하는 연구는 그 이후인 지난 9월에 공고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정보 보호 조치,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가 사후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저궤도 위성 감시 체계는 2026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 이전까지는 전파 간섭·광해·사이버 공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어렵다. 국제 사회는 전파 간섭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의 무선통신 부문(이하 ITU-R)은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간섭 최소화를 위한 국제 표준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 기술·운용·요금 문제를 연구하며 각국이 준수해야 할 주파수 할당 및 운용 권고안을 채택한다. 특히 ITU-R Working Party 7D는 전파 천문학용 주파수 대역이 상업용 통신 신호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천문 관측 전용 주파수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은 스페이스X 등 주요 사업자와 데이터 공유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위성 전파 간섭 수준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측 주파수대 내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 방출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위성이 방출하는 전파는 전파 간섭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위성 방출 전력의 상한을 명시한 국제 기준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광해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천문연맹(The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IAU)이 위성의 밝기를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7등급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안은 UN 우주 평화 이용 위원회(UNCOPUOS)의 공식 문건에 포함돼 있으며 각국이 위성 설계 및 운영 단계에서 반사광 저감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실제로 일부 사

업자들은 반사율을 낮춘 소재를 사용하거나 위성 각도를 조정하는 등 개선책을 시도하고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위성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EU 우주법을 발표했다. 해당 법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위성 상실이나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모든 우주 운전자에게 위성 생애 주기 전반 걸친 위험 평가와 보안 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EU 우주법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 ▲사이버 보안 위험 평가 및 보안 설계 적용 ▲침해 발생 시 보고 의무 및 비상 대응 체계 구축 ▲운영 전 과정에 걸쳐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요구순으로 명시하고 있다.

KAIST 인공지능연구소 이철 우주연구원님 인터뷰

저궤도 위성 급증, 기술 확장 속 우리 하늘을 지키는 과제



이철 우주연구원 (KAIST 인공지능연구소)

라도 우주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임무를 발굴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저궤도 위성의 기술적 이점

지상에서는 대기 영향으로 인해 영상 왜곡이나 빛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위성은 이런 제약이 없어 관측에 유리하다. 또한 망원경의 지름이 작아지더라도 다양한 궤도상의 천문관측 카메라를 활용해 폭넓은 관측이 가능하다.

안정적인 저궤도 위성 운용 방안은

개별 위성의 기술은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나 다수의 위성을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 위성의 경우 추가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사용자 수요에 맞춰 방문 주

기와 상대적 배치를 유지하기 위한 궤도 운용 기술이 요구되며 위성 간 통신과 다수 위성의 자율 운용 기술 역시 핵심적인 요소다.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는

지난 9월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는 저궤도 위성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보안 문제와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시스템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우주시스템 위협 사례와 위성 운용에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되는 우주시스템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 또한 설계·개발 단계 및 운영·활용 단계, 폐기 단계의 사이버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

전파 자원 관리와 간섭을 최소화하는 전략은

우주 개발에서 전파는 한정적인 자원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레이저 등을 이용한 위성 간 또는 위성-지구 간 통신이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전파 간섭 문제는 국내외 규제를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원을 공유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우주 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저궤도 위성 수의 증가는 우주쓰레기 폭증으로 이어진다. 이미 올라가 있는 위성만으로도 미래 우주 이용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우

주쓰레기 관련 규제를 통해 관리하고자 한다.

KAIST 인공지능연구소는 우주쓰레기를 포획해 제거하는 위성(이하 포획 위성)을 개발하고 있다. 포획 위성은 목표 물체의 궤도와 유사한 궤도로 이동한 뒤 근거리 센서를 활용해 물체를 식별하고 접근한다.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 이내로 가까워지면 대상의 움직임을 계산해 위성과의 상대 운동을 동기화하고 작살 등 포획 장치를 사용해 물체를 포획한다. 이런 포획 위성은 랑데부, 우주물체 접근, 포획 등의 과정에서 소행성을 대입해 심우주 탐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비용 위성에 대한 궤도 조정과 연료 충전 등 경제성이 있는 궤도 상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위성 증가의 방향성은
우주 자원의 가치를 고려하면 위성 수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지구 관측과 통신을 위한 저궤도 위성부터 우주 탐사까지가 중요한 과제라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

2025 세종대신문 찬반토론,

주 4.5일제가 현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언급되면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주 4.5일제 도입 시 기존 임금을 유지해야 하는지, 근로 시간에 맞춰 삭감해야 하는지 학우들과 세종대신문사 기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임금을 유지해야 한다

김민성(영어영문학·23) 학우

주 4.5일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첫째, 주 4.5일제는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일부 직무의 근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와 임금 충격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는 경기 침체에 대해 대신 근로 시간을 줄여 고용을 유지해 온 독일의 단시간 근로 제도(Kurzarbeit)와 유사한 논리다.

둘째, AI 기반 자동화로 시간당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인간과 기계가 업무를 분담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대규모 고객지원조직의 생산성이 AI 도입 후 약 14% 향상됐듯이 생산성 향상과 근로 시간 단축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가 ▲대체 인력 운영 ▲업무 프로세스 개선 ▲임금 보전 등을 결합한 시범 사업이 이미 마련한 만큼 '정책 실험-평가-확대'라는 리스크 관리형 도입이 가능해졌다.

근로 시간 단축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조건부로 긍정적이다. ▲성과 관리 ▲업무 재설계 ▲AI 활용이 함께 이뤄질 경우 시간당 산출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아이슬란드, 영국, 포르투갈 등에서 진행된 대규모 파일럿에서는 근로 시간 단축 후 성과 유지 및 개선과 함께 이직률·병가 감소가 확인됐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법인은 지난 2019년 8월 매주 금요일을 유급 휴가로 지정하는 주 4일 근무를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직원 1인당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9.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 가능성은

주 4.5일제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

렵다. 정유·발전 등 연속공정 산업이나 의료·소방과 같은 공공안전 분야, 대면 서비스업처럼 교대 인력 확보가 필수적인 분야는 근로 시간 단축 시 공백이 크다.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콘텐츠 등 산출 기반 직무는 제도 적용의 적합성이 높다.

또한 업종별 차등 적용 시 고려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공성과 필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업무의 디지털화·AI 도입 수준 ▲연속공정 여부와 안전 위험도 등 대체 가능성 ▲인력 공급 상황과 교대 근무 편의성 ▲품질·납기·부가가치 등 성과 측정의 용이성 등이다.

우리 사회가 주 4.5일제를 도입 준비 여부는

법·재정 기반이 마련되는 등 일부 준비는 진행 중이므로 시범 운영 후 단계적 확대 방식이 현실적이다. 정부는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법적 근거와 워라밸 +4.5 예산을 마련했으며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관련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저성장 국면에서 전면적인 일괄 도입은 부담이 큰 만큼 평가와 보안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정책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이미 주 4.5일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단계적 도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기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격주 주 4일제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등 임금 감소 없는 선택형 근로 시간 단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월 26만 원) ▲근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기업·근로자 대상 조사 등 정책 효과 분석까지 포함된 지원 체계를 마련한 상태다.

이처럼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을 갖춘 작은 규모

의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과 실무적 문제를 검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다 지자체로의 점진적 확산도 가능하다. 즉 경기도의 사례처럼 '시범 적용·평가·보완·확대'의 순서를 밟는 방식이 현실적인 도입 경로라 볼 수 있다.

주 4.5일제가 노동시장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은

긍정적으로는 AI 기반 생산성 체제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이직률과 번아웃이 줄어들며 근로자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또한 재택·유연근무와 결합해 기업의 인재 유치력도 강화될 수 있다.

반면 유의해야 할 점도 존재한다. 업종별 적용 가능성의 차이로 인해 근로 조건 격차가 확대될 수 있고 의료·소방 등 필수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는 교대 및 대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 시간 단축 시 임금 보전이 지속되려면 재정적 부담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제도 도입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체계 마련도 요구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시적 운영과 성과 기반 지원을 통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세종대신문사 기자들의 생각

주 4.5일제의 도입 취지는 단순히 근로 시간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과 자기개발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취지를 고려하면 임금 삭감을 병행하는 방식은 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한다. 동일한 노동 강도와 성과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권리 보장이 아닌 부분 시간제화에 불과하다. 이는 소득 감소를 통한 국가 경제 전반의 소비 위축, 기업의 인재 유출, 생활 불안정 등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스페인의 통신사 텔레포니카는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하며 임금을 15% 삭감했으나 근로자들의 참여가 저조해 제도를 폐지했다.

다만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권리보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기업이 단기적인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보조금, 세제 감면 등 정책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 주 4.5일제가 단순한 근로 시간 조정에서 그치지 않고 근로자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

김예린 기자 moondarae@

근로 시간 단축의 핵심은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지 임금 삭감이 아니다. 해외 여러 사례에서는 근로 시간을 줄여도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된 사례가 보고돼 왔다. 또한 근로 시간 단축을 임금 삭감과 연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것이다. 기업이 단기 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을 줄인다면 장기적으로 인재 이탈과 조직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임금을 유지하며 근로 환경을 개선한다면 근무 의욕과 직무 만족도가 높아져 기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주 4.5일제는 단순한 시간 축소가 아닌 근로 방식의 혁신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제도 도입의 전제는 임금 삭감이 아닌 효율성 제고와 공정한 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주 4.5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제도적 준비가 필수적이다. 근로 시간 단축이 특정 업종이나 직무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생산성 측정을 위한 평가 체계 역시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구조와 업무 분장상 단축 근로를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술, 인력 지원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박혜린 기자 hyerin@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들 중에는 퇴근해서 간신히 밥 한 끼 챙기기도 벅거운 이들이 적지 않다. 집에 돌아가는 데만 시간도 넘게 걸리는 경우 잠들기 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온전한 개인 시간은 반나절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근로자들은 지친 몸과 마음을 간신히 이겨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기계처럼 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주 4.5일제의 도입은 이런 문제를 완화할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Herzberg의 동기-위생 이론에 따르면 일·생활 균형, 근로 환경과 같은 위생요인이 개선되면 직무 불만족이 줄어든다. 직무 불만족이 감소할 때 근로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더 큰 에너지와 집중력을 투입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시간을 줄이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워라밸+4.5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6년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약 27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는 기업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효율 중심의 오래된 관행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근로 환경으로 나아가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주 4.5일제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배서현 기자 Hyeonee@

주 4.5일제는 장시간 노동 관행에 갇힌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안이다.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여섯 번째로 긴 연간 근로 시간인 1,872시간을 기록하며 과도한 노동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생산성 중심의 근무 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시간 근로는 번아웃 증가, 지출산 약화, 직무 스트레스 심화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주 4.5일제와 임금 유지는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일상생활의 안정이라는 근본적 변화를 제공한다. 임금을 유지한 주 4.5일제 도입은 기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근로자 만족도와 조직 충성도가 높아지면서 이직률을 낮추고 특히 워라밸을 중시하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근무 조건으로 작용해 우수 인재 확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실제로 해외 실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영국의 '4 Day Week' 실험에서는 직무 번아웃이 71% 감소하고 업무 역량이 55% 향상됐으며 평균 매출은 35% 증가했다. 이직률 또한 57%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 근로자의 임금을 유지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늘어나면 소비 역시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추가로 확보한 반나절을 문화 활동, 여행, 외식, 자기개발 등에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레저·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온다.

이재원 기자 jaewonii@

주 4.5일제 도입 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

국동원(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25) 학우

근로 시간 단축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반드시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 시간이 줄어도 업무량이 그대로라면 5일치의 업무를 4.5일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면서 오히려 업무 강도가 증가할 수 있다.

주 4.5일제가 노동시장 구조나 사회 문화 전반에 미칠 영향은
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하루 업무량이 늘어날 경우 야근이나 초과 근무로 이어져 평균 퇴근 시간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구조가 고착된다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주 4.5일제 도입 전 필요한 보완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인건비 부담 완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동화나 인력 충원 등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근로 시간 단축이 곧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 4.5일제 차등 도입의 기준은
근로의 유연성 여부다. 업무 성과가 근로 시간에 직접 비례하지 않고 비교적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사무직 등은 적용이 쉽다. 반면 매출이 운영 시간과 직결되는 요식업이나 상시 운영이 필요한 병원·소방·경찰 등 공공 서비스 분야는 적용이 어렵다.

기존 임금을 유지하며 주 4.5일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겪게 될 부담은
시간당 인건비가 상승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생산성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업무량 감소와 함께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익명의 A 학우

기존 임금을 유지하며 주 4.5일제 도입 시 기업이 겪게 될 부담은
기존 임금을 유지한 채 근로 시간만 줄이는 방식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우선 인건비 부담이 즉각적으로 증가한다.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 시간을 줄일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당 인건비가 상승하고 생산성에 대한 압박이 커진다. 특히 중소기업은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또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필수 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 충원 혹은 외주를 맡기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또한 기업의 비용을 확대시킨다. 끝으로 성과 대비 보상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며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은 비용 대비 산출이 낮아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임금 조정이나 성과 기반 임금 체계를 병행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 생각된다.

주 4.5일제 도입 전 선행돼야 할 보완책은
근로 시간 축소에 앞서 기존 업무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 ▲불필요한 회의 축소 ▲업무 우선순위 조정 ▲업무 자동화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조직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 근로 시간 단축에 맞춰 임금이 조정되더라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비

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한시적으로 체제를 지원하거나 컨설팅 도움을 주는 등의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끝으로 임금·보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임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성과 기여도 ▲업무 강도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현장에서 혼란이 줄어들 수 있다.

임금 조정 없이 근로 시간만 단축했을 때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당 인건비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초기에는 단기적인 정부 지원이나 시범 사업을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제도가 상시화되면 인건비 구조 자체가 지속적으로 기업 재무에 압력을 가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노동집약적 업종은 이런 비용 상승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의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생산량과 매출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이상 근로 시간 단축과 임금 유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불균형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 조정 기준을 마련하거나 성과 기반 보상체계로 전환하는 등 보상구조의 재설계가 병행돼야 한다.



이익 추구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주 4.5일제 도입이 기업의 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기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기업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단순히 수익 대비 인건비가 증가하는 측면뿐 아니라 이익 감소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 4.5일제 도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며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이나 신뢰에도 부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즉 기업은 여러 이해관계자와 얽혀 있기 때문에 기업이 근로 시간 대비 임금을 독단적으로 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근로자는 임금 감소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은 다양한 보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톡옵션 등의 성과 관련 보상으로 근로자의 전체 보상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해당 방안을 통해 기업은 이익을, 근로자는 권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수영 기자 suyoung@

주 4.5일제 논의의 핵심 쟁점은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다. 주당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일정 수준의 임금 삭감은 제도적 일관성을 위해 불가피하다. 임금은 근로 시간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만큼 시간 단축과 임금 유지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직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임금 체계의 기준도 모호해질 수 있다.

또한 임금 유지가 전제되면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진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인력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조직은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기존 인건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이는 채용 축소, 복지 축소, 외주 확대 등 추가적인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임금 일부 삭감은 제도 안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일정 부분을 감내해야 지속 가능한 전환이 가능하다.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자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얻으며 삶의 질 개선과 스트레스 감소 등 장기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제도의 지속성과 현실성을 고려할 때 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합리적 범위의 임금 조정은 주 4.5일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고 판단한다.

김진영 기자 jinyoung@

주 4.5일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기업의 경제 원칙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 기업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시간과 노력의 양에 비례해 임금을 지급한다. 주당 근로 시간이 5일에서 4.5일로 단축된다는 것은 기업에 제공되는 노동력이 명백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성이 기적적으로 20% 이상 향상돼 5일치 업무를 4.5일 만에 완벽히 해낸다는 보장이 없다면 삭감은 노동력 감소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다.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기업은 감소한 근로 시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이전과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인건비가 상승한다. 증가한 인건비 부담은 투자 위축이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전가돼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기업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지면 주 4.5일제 같은 복지 제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나아가 임금을 삭감해 확보한 비용은 기업이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추가 고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근로 시간 단축이 실질적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주 4.5일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임금 조정을 통한 비용 분담이 필수적이다.

노민호 수습기자 wvidee@

주 4.5일제 도입 과정에서 제기되는 임금 삭감 논쟁은 흔히 기업의 이윤 보호를 위한 주장으로 비판받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 조건이다.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도 동일한 임금을 유지할 경우 기업은 인건비 부담 증가와 생산성 저하라는 이중 압력에 직면한다. 이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고용 축소나 신규 채용 감소 같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작용은 결국 제도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주 4.5일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건강한 지속을 위해서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공정성의 원칙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근로를 유도해 생산성을 보완하는 동시에 기업이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제도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균형적 접근이다. 특히 임금 조정은 근로 시간 단축을 단순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만들기 위한 핵심 장치다. 결국 임금 조정 논의는 주 4.5일제의 가치를 약화하는 요소가 아닌 제도가 사회 전반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필수적인 기반이다.

박혜민 수습기자 been423@

교수칼럼

교육과정의 철학과 우리 대학의 과제



김희연 교수 (교육학)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수·학습의 절차나 교재의 목록이 아니다. 인류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담은 사회적·철학적 산물이다. 교육과정에는 시대정신이 반영되며 교육적 문제의식이 제도적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성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며 다음 세대에

게 어떤 삶을 준비시킬 것인가를 묻는 일과 같다.

문제는 교육과정이 한 번 정립되면 쉽게 고착화되거나 반복된다는 점이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식과 가치의 지형 또한 새롭게 그려진다. 따라서 교육과정은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되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사회적 요구와 교육적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 교육은 사회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변혁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교육과정이 있다.

1970년대 이후 전개된 '교육과정 재개념화 운동'은 이런 문제의식을 더욱 선명히 드러냈다. 타일러 모형

에 파이너는 교육과정을 인간의 실존적 경험 해석으로 보았고 애플은 교육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기루는 교육을 불평등에 저항하는 행위로, 프레이리는 억압받는 이들이 의식화를 통해 스스로를 해방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들뢰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습을 '동일성의 반복'이 아니라 '차이의 생산'으로 보았다. 교육과정은 학습자를 고정된 목표로 이끄는 절차가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과 가능성을 실험하게 하는 리좀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분명하다. 교육과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의 도구를 넘어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변혁하는 힘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는 계획된 내용을 수동적으로 습득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교육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실천하는 주체로 자리해야 한다. 교육이 기술적·관리적 논리에서 벗어나 인간의 실존과 사회적 책임을 회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배움이 가능하다.

오늘날 인류는 기후위기, 양극화, AI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대에 교육과정이 단순히 지식의 목록이나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 머문다면 교육의 존재 이유는 약화될 것이다. 이제 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적 역량 ▲비판적 사고 ▲창의성 ▲협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과거를 반복하는 장치라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그려가는 도전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새로 쓰여야 한다. 영유아기는 자신과 세계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시민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며 고등교육은 지식 보존·전달을 넘어 새로운 가치와 문제의식을 창출하는 장이어야 한다. 대학 교육의 핵심 과제는 단순한 직업 역량 함양을 넘어 비판적 성찰과 민주적 실천의 힘을 기르는 데 있다.

우리 대학은 다양한 학문적 성취와 교육적 실천을 통해 자부심을 쌓아왔다. 그러나 교육과정 혁신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다. 대학본부의 정책뿐 아니라 단과대학과 학

과, 그리고 교수 개인의 강의 속에서 교육과정의 철학과 문제의식이 살아 있어야 한다. 교수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과 성장을 중심에 두고 교육내용을 재맥락화하는 창조적 리더여야 한다. 교수의 교육 경험 성찰과 전문성의 확장은 곧 대학의 교육 경쟁력이 된다.

교육과정은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비전과 실천을 담아내는 살아 있는 약속이다. 우리 대학이 지닌 학문적 역량과 교육적 열정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을 지속한다면 학생의 삶의 의미를 높이고 더 건강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나들이

K리그의 또 다른 매력, 이색적인 응원 문화를 만나다



박수빈(자유전공학·25)

'슛~ 골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이 들어가는 순간, 함성으로 경기장 전체가 진동한다. 열기는 한껏 고조되고 팬들의 우렁찬 응원이 경기장 곳곳에 울려 퍼지며 그 속에서 선수들은 치열하게 경기를 이어간다. 수천 명의 관중이 하나 돼 응원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응원은 단순한 함성을 넘어 각 구단의 개성과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런 응원 문화는 해외 리그뿐 아니라 K리그에서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구단들은 저마다 다채롭고 개성 있는 응원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독특한 응원 도구를 활용하거나 연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응원을 선보이기도 한다. 경기의 긴장감뿐 아니라 팬들의 응원을 보는 즐거움 또한 K리그의 큰 매력이다. 이에 필자는 K리그 구단의 이색적인 응원 문화 세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수원삼성블루윙즈(이하 수원삼성)의 경기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도 수많은 우산이 펼쳐진다. 수원삼성의 '우산 돌리기' 응원은 K리그를 대표하는 퍼포먼스로 손꼽힌다. 후반전이 시작되면 서포터스들은 '청백적의 챔피언' 응원가를 부르



며 팀의 상징색인 백색, 적색, 청색의 우산을 펼친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우산 물결이 빙글빙글 도는 모습은 마치 푸른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장관을 연출해보는 이를 매료시킨다. '어디라도 꿈속이라도 널 따라가'라는 응원가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팀과 함께하겠다는 팬들의 마음이 우산 속에 담겨있다. 이 응원은 남미 축구 리그의 응원 문화를 차용해 그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남미의 자유분방함과 수원삼성의 질서정연한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포항스틸러스(이하 포항)의 홈 경기에서는 특별한 관중을 만날 수

있다. 바로 포항의 자랑인 해병대 장병들이다. 붉은 옷을 갖춰 입은 장병들의 '팔각모 사나이' 군가 폐창은 포항의 팬들은 물론 원정팀까지 압도한다. 이들은 시즌 개막전이나 국군의 날 등 주요 경기마다 경기장을 찾아 우렁찬 목소리로 선수들을 응원한다. 포항시는 해병대 제1사단과 교육훈련단이 위치한 도시로 군과 지역 사회가 오랜 세월 밀접한 유대 관계를 쌓아왔다. 이로 인해 해병대 장병들의 응원은 포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다. 지역과 군이 함께 만들어낸 응원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사례로 해병대 장



병들의 열성적인 응원은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에 걸맞게 선수들에게 강한 힘을 불어넣는다.

마지막으로 대구FC의 시그니처 응원인 '발 응원'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 속 대구FC의 홈구장 '대구 iM뱅크PARK'의 관중석 바닥은 경량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 발을 구르면 경기장 전체로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진다. 이를 활용한 '쿵쿵' 응원은 팬들이 발로 '쿵쿵' 소리를 낸 뒤 큰 소리로 '골!'을 외치는 방식이다. 주로 코너킥이나 결정적인 공격 상황에서 사용되며 선수들에게 자신감과 집중력을 불어넣는다. 관중이 하나 돼 발을 굴러 만드는 진동은 경기

장을 요동치게 만들며 긴장감과 몰입도를 한층 높인다. 대구FC의 발응원은 경기장 자체를 응원 도구로 활용한 독창적인 사례로 초보 팬도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응원 방식이다. 덕분에 팬들이 하나로 결집하며 대구FC만의 응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K리그 구단들은 저마다의 역사와 지역색을 담은 응원 문화를 자랑한다. 주말마다 경기장은 뜨거운 팬심으로 들썩이며 다채로운 응원들로 달아오른다. 화면 너머로는 느낄 수 없는 생생한 '역동과 감동'의 K리그 열기를 한 번쯤 경기장을 찾아 경험해보기를 권한다.

독자 에세이

프리드라이프 몸값 8,830억 인정받았지만, 국내 상조 가치 '명암'



김수진(경영·21)

국내 대표 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가 8,830억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움직여 매각됐다. 이번 거래는 기업가치 산정이 쉽지 않았던 상조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상조 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은 한계를 보여준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상조업계 브랜드평판 1위는 교원라이프, 2위는 프리드라이프다. 뒤이어 ▲소노스테이션 ▲보람상조라이프 ▲더케이에다함이 3~5위를 차지했다. ▲감가상각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이자비용을 합산해서 구하는 프리드라이프의 EBITDA*는 1,040억 원이다. 매각가격을 EBITDA로 나눈 값인 EV/EVITDA Multiple** (이하 멀티플)은 8.49로 계산된다. 이를 기준으로 프리드라이프와 유사한 브랜드 지

수를 가진 기업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소노스테이션의 EBITDA는 123억 원으로 멀티플 8.49를 곱하면 기업가치는 약 1,050억 원이다. 보람상조라이프의 EBITDA는 8억 9,480만 원으로 75억 9,745만 원, 더케이에다함의 EBITDA는 100억 5,402만 원으로 853억 6,505만 원의 기업가치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의 대표 상조회사들은 이보다 높은 멀티플을 보이고 있다.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Service Corporation International(이하 SCI)은 1,900개 이상의 장례식장과 400여 개의 묘지·화장 시설

을 운영하며 연 매출 약 40억 달러를 기록한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SCI 주가는 81.43달러고 멀티플은 12.7이다. Carriage Services, Inc(CSV) 역시 텍사스주 본사로 M&A 중심의 사업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현재 24개 주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주가는 44.09달러고 멀티플은 10.16이다. Matthews International Corporation(MATW)은 오하이오주에 본사를 두며 장례 서비스보다는 묘비·기념비·유골함 등 기념물 및 장례용품 자재를 생산·판매하고 설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주가는 2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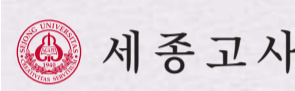
달러고 멀티플은 12.96이다.

세 기업의 평균 멀티플은 11.94로 프리드라이프의 멀티플인 8.49보다 높다. 프리드라이프의 낮은 멀티플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실적을 기준으로 멀티플이 낮다는 것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프리드라이프가 일정 부분 할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성장성이 둔화했거나 부채비율이 높다면 리스크가 반영돼 멀티플이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프리드라이프의 부채비율은

2023년 91.41%에서 2024년 89.46%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단순한 저평가가 아닌 합리적인 리스크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할인이 적용됨을 시사한다.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EV/EBITDA Multiple: 기업가치를 EBITDA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평가함

세종고사



이름: _____
학번: _____

1. 제38대 총학생회 '연' 이 하반기 예·결산안과 함께 회·세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회의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1번)
답: _____

2. 대학의 청년 특화 고용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센터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2번)
답: _____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대 신문사

- 답안지를 채워라!
- 1. 신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본다.
- 2. 카카오톡에서 @세종대신문을 추가한다.
- 3. 카카오톡에 문제의 답과 아래 사항을 보낸다.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707호 당첨자
정답: PBL 강의/약 186억 원
당첨자 : 이채은 (디자인이노베이션학·25)
조용준 (교육학·24)

정답: 000000000 / 0000000000
이름 / 학과 / 학번

기자가 말한다1

변화와 불편 사이에 선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재원 기자

지난 9월 카카오톡이 단행한 대규모 업데이트가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업데이트 직후 카카오톡 주가는 4.7% 하락했고 나흘간 시가총액 약 3조 원이 증발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평점은 1.1까지 떨어졌다. 이번 개편은 메신저에 플리케이션(이하 앱)의 핵심인 대화 기능보다 콘텐츠 소비 기능에 초점을 맞추며 화면 구성과 기능 전반을 바꾼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친구 탭은 목록 형식에서 피드 형식으로 바뀌었고 새로 추가된 지금 탭에는 광고·쇼츠·영상이 배치됐다. 그 결과 카카오톡은 메신저 앱임에도 불구하고

타 SNS처럼 관계가 노출되고 원치 않는 정보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조가 됐다. 실제로 비누랩스인 사이트가 카카오톡 업데이트 후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9%가 이번 개편 후 '더 불편해졌다'고 답하며 '비슷하다(14.8%)', '더 좋아졌다(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카카오는 개편의 배경에 대해 '카카오톡 일일 체류 시간 감소와 10~20대의 타 메신저 사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화 경험을 더욱 쾌적하고 즐겁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카카오톡은 단체 공지, 일정 조율, 자료 공유 등 생활 전반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디자인 변경을 넘어 소통의 방식 자체를 흔든 셈이다. 메신저 본연의 기능보다 수익 논리를 우선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논란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섰다. 대학생인 필자에게 카카오톡은 동아리 소통, 수업 공지, 팀플 조율 등 대학 생활 전반과 직결되는 필수 도구다. 그러나 사용 방식이 바뀌면서 일상의 효율성까지 흔들리고 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조차 불편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기술에 친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나 어르신 사용자들은 더욱 큰 혼란과 피로감을 겪고 있다. 세대별 기술 격차를 무시한 급격한 변화는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물론 플랫폼의 성장 과정에서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이용자의 필요보다 광고 노출과 체류 시간 증대 등 기업의 이익에 더 무게를 둔 결과다. 문제의 핵심은 개편이 충분한 이용자 의견 수렴 없이 급격히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용자의 사용 습관이나 접근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변

화는 기능이 개선되더라도 불편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필수 플랫폼이라면 그 변화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독점적 지위를 가진 서비스일수록 변화는 이용자의 사용 습관과 접근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도구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되는지,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되묻는 계기다. '무료 서비스이니 불평할 수 없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다. 이용자는 광고 수익의 원천이자 데이터 제공자이며 그만큼 주체적 권리를 가진 존재다. 카카오가 진정으로 이용자와 함께하려 한다면 지금의 불만을 단순한 소음이나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이려야 한다. 이번 사태가 일시적 불편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기술보다 신뢰를 우선하는 변화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기자가 말한다2

KBO 붐과 암표의 딜레마



노민호 수습기자

2025년 한국 프로야구(이하 KBO) 리그가 지난달 26일 막을 내렸다. 한국시리즈에서 LG 트윈스가 한화 이글스를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꺾으며 2년 만에 다시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극적으로 정규시즌 최종전에서 1위를 확정된 LG 트윈스는 한국시리즈까지 제패하며 1990년, 1994년, 2023년에 이어 통산 4번째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KBO 리그는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다시 썼다. 2024 시즌 국내 프로 스포츠 최초로 단일 시즌 관중 1,000만 명을 넘긴 데 이어 올해는 1,231만 명을 기록했다. 시즌 초반부터 유례없는 관중 수를 기록하며 평일 경기에도 구름 관중

을 불러 모았고 주말 경기는 연일 매진됐다. 야구 관망이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트렌디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MZ세대 팬들의 대규모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KBO 리그가 1,000만 관중 시대를 돌파하며 국내 스포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흥행을 견인한 요인은 다양하다. 김광현, 류현진 등 메이저리그 출신 베테랑 선수들의 지속적인 활약과 더불어 김도영, 문동주 등 신예 스타의 폭발적인 탄생으로 경기 수준이 높아졌다. 또한 독주팀 없이 시즌 내내 이어진 치열한 순위 경쟁은 매 경기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만들었다. 여기에 야구장 자체가 하나의 매력적인 콘텐츠가 되면서 SNS 확산 효과가 더해졌다. 잘 갖춰진 구장에서 즐기는 치킨과 맥주, 유니폼을 입고 함께 즐기는 응원 문화, 그리고 이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공유하는 직관 인증 트렌드는 야구를 단순한 스포츠 관람이 아닌

MZ세대의 대표 여가 활동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가 맞물려 KBO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뜨거운 흥행의 이면에는 암표 거래라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인기 구단의 주말 경기나 은퇴식 또는 특별한 이벤트 경기의 경우 예매가 시작됨과 동시에 수십 초 만에 표가 매진되는 일이 잦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 확보한 암표상이 이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리셀 사이트에 올려 정가 대비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폭리를 취한다. 실제로 1만 5천 원인 예매 가격이 암표 시장에서 15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이런 불법 거래는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이뤄지고 있어 KBO나 구단 차원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KBO는 암표 근절을 위해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개정된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매점 및 재판매 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각 구단은 CAPTCHA 인증이나 1인당 예매 가능 매수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른 제재와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암표 거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암표 근절을 위해서는 팬 스스로 암표 거래를 거부하고 신고에 참여하는 시민 의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KBO 리그는 지금 역대급 흥행이라는 달콤한 결과를 맛보고 있다. 그러나 이 축제가 소수의 이익 집단에 이용당하는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워서는 안 된다. 팬들의 순수한 사랑으로 만든 이 붐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관람 문화가 절실하다. 정당한 절차로 티켓을 구매하고 공정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KBO의 인기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사실1 ▶1면에서 이어짐

정보 공개에서 시작되는 학우 안전보장

대학은 학생의 지적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하게 배움이 이뤄질 수 있는 보호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습실 사고, 캠퍼스 내 교통사고 등은 언제든 현실로 닥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대학 실습·실습실 사고는 1,113건에 달했다. 이런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351개의 대학이 이 공제에 가입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은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고의 부담이 학생 개인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우리 대학 역시 재학생과 연구생이 수업이나 교내 활동 중 입은 피해에 일정한 보상책임을 지기 위해 공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대학은 공제 제도의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전북대학교는 ▲가입금 1인당 예매 가능 매수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른 제재와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암표 거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암표 근절을 위해서는 팬 스스로 암표 거래를 거부하고 신고에 참여하는 시민 의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KBO 리그는 지금 역대급 흥행이라는 달콤한 결과를 맛보고 있다. 그러나 이 축제가 소수의 이익 집단에 이용당하는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워서는 안 된다. 팬들의 순수한 사랑으로 만든 이 붐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관람 문화가 절실하다. 정당한 절차로 티켓을 구매하고 공정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KBO의 인기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대학은 학생의 지적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하게 배움이 이뤄질 수 있는 보호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습실 사고, 캠퍼스 내 교통사고 등은 언제든 현실로 닥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대학 실습·실습실 사고는 1,113건에 달했다. 이런 위험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운영하는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351개의 대학이 이 공제에 가입했으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은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고의 부담이 학생 개인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우리 대학 역시 재학생과 연구생이 수업이나 교내 활동 중 입은 피해에 일정한 보상책임을 지기 위해 공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대학은 공제 제도의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전북대학교는 ▲가입금 1인당 예매 가능 매수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른 제재와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암표 거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암표 근절을 위해서는 팬 스스로 암표 거래를 거부하고 신고에 참여하는 시민 의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KBO 리그는 지금 역대급 흥행이라는 달콤한 결과를 맛보고 있다. 그러나 이 축제가 소수의 이익 집단에 이용당하는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워서는 안 된다. 팬들의 순수한 사랑으로 만든 이 붐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관람 문화가 절실하다. 정당한 절차로 티켓을 구매하고 공정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KBO의 인기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다.

독자 참여와 기사 제보 바랍니다

세종대학우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 메일 press@sejong.ac.kr
- 인스타그램 [@sejongpress](https://www.instagram.com/sejongpress)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세종대신문](https://open.kakao.com/id/sejongdaeshinmun)

*세종대신문 앱으로 보는 방법
세종대학교 앱 - 상단 메뉴 - 대학생활 - 세종신문

사실2 ▶2면에서 이어짐

책임은 분명히 하되 미래는 열어둬야 한다

지난 2023년 5월 발표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2026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과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이하 학폭) 조치 사항이 대입의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의무 적용 이전인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6개 대학이 학폭 가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 처리하기도 했다. 대학이 학폭을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아닌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입시 단계부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학폭을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대학 입시의 결과를 좌우하게 되면서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개인의 미래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청소년기의 낙인이 평생의 기회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폭력으로 타인의 삶의 한 단락을 무너뜨린 이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 미래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취하는 조치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 제외)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대학들은 조치 수준에 따라 감점 비율을 달리 적용한다. 그러나 이는 일관성 및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정부의 통일성 있

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입시 중심 접근이 만들어내는 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징계를 피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서로를 신고하는 이른바 맞푼, 소송의 고착화 등은 학폭 문제를 교육이 아닌 법적 분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피해학생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학폭 자체를 또 다른 경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학폭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법률 대응의 현상이 되는 상황은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이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가. 가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빠르게 강화돼 왔지만 정작 피해학생의 장기적 회복과 학교 적응을 돕는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피해학생이 안전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면 아무리 엄격한 제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일과 미래의 가능성을 닫지 않는 일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분명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그 제재가 학생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에만 작동할 때 교육의 본질은 훼손된다. 학폭의 입시 반영 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처벌과 회복, 책임과 변화의 균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대학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가해학생을 입시 시장에서 걸러내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된다. 학폭의 발생을 줄이고 피해학생의 회복을 돕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학폭은 단순히 가해학생의 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제도적 강화가 필요한 만큼 그 제도가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을 규정하고 고착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책임은 분명히 하되 미래는 닫지 않는 제도.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균형이다.

세종 만평

최정희 (만화애니메이션학·21) 객원기자

글과 말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지성의 첫걸음

국어국문학과



김승구 교수
(국어국문학과)

우리 대학 국어국문학과는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학을 깊이 탐구하며 시대를 관통하는 지성과 통찰력을 배양하는 인문학의 중심 학과다.

국어국문학과와 교육 목표와 비전, 학과 생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본지는 국어국문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승구 교수, 김영현 학생회장, 문지원 학우, 이정현 학우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노민호 수습기자 vwidee@

국어국문학과에 대해

국어국문학과의 설립 취지와 배경은

김승구 교수: 국어국문학과는 한글과 이로부터 창조된 유구한 민족문화의 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현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에 설립 취지를 두고 있다.

국어국문학과의 차별점은

김승구 교수: 전통적인 국어학과 국문학의 핵심 강의를 토대로 ‘한국문학과 문화콘텐츠’, ‘AI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등과 같은 응용 강의를 배치해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에 고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학과의 강사진은 일반적인 교수 중심의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다.

국어국문학과의 갖춘 경쟁력은

김승구 교수: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은 ▲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와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이다. 국어국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를 학습하면서 직업 세계에서 요구하는 정확하고 창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문학 공부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사고를 풍부하게 이해하며 다양한 상황과 감정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문학적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통해 국어국문학 공부를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국어국문학과 졸업생의 진출 분야는

김승구 교수: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교사, 작가, 출판사 등 전통적인 분야뿐 아니라 사회 각층의 다양한 직업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삼성SDI의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졸업생, 현대자동차의 미래 전략 본부에서 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을 하는 졸업생도 있다. 무엇을 꿈꾸든 국어국문학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다.

졸업 후 진로 목표나 관심 있는 분야는

김영현 학생회장: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국어를

심도 있게 공부할 예정이다. 언어와 문학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하며 생각과 감정을 함께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다.

문지원 학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어 광고 기획이나 마케팅 분야로 진로를 계획했으나 최근에는 교육대학원 진학이나 출판 분야도 고민하고 있다. 국어국문학과는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학과이기에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중이다.

국어국문학과 내 연구실의 연구 주제는

김승구 교수: 연구실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공계 학과와는 다르게 국어국문학과에서는 개인 중심의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학부생들은 학과 강의와 개인의 진로에 맞춰 자유롭게 주제를 설정하고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교수의 조언을 받는다.

국어국문학과의 주요 행사나 프로젝트는

김승구 교수: 학생회 주관으로 작품을 공모해 문집을 제작하고 우수 작품을 시상하는 활동이 이

어가고 있다. 한글날에는 한글날 기념행사를 열기도 하고 11월에는 ‘국문인의 밤’ 행사를 개최해 한 해의 성과를 공유하고 학과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김영현 학생회장: 그동안 국어국문학과 학우들이 함께 즐기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학과의 정체성과 추억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자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국문인의 밤’ 행사를 6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 행사는 학우들의 문집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문 신문고’ 제도를 기획했다. 과방과 온라인 폼을 통해 누구나 익명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게 해 학우들이 평소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을 부담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모든 학우가 학과 소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어국문학과 재학생 카카오톡 공지방을 개설해 소통을 한층 원활하게 만들었다.

국어국문학과의 진학하며

국어국문학과의 진학하게 된 계기는

김영현 학생회장: 고등학교 시절부터 국어를 가장 좋아했다. 특히 문학 작품을 배우면서 작품 속 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며 다양한 세계를 접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품의 사회적 배경이나 작가의 시선을 깊이 이해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국어국문학과 진학으로 이어졌다.

이정현 학우: 학창 시절 국어 수업은 언제나 가장 기다려지던 수업이었다. 한 편의 시가 낯선 감정을 건드리고 한 편의 소설이 내가 알지 못했던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언어가 가진 힘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국어가 세상을 이해하는 창문이자 사람을 이해하는 언어의 예술로 느껴져 국어국문학과 진학을 결심했다.

국어국문학과 입학 전후 차이점은

이정현 학우: 입학 전에는 국어국문학과의 조용하고 학구적인 분위기에 익숙해 활발한 성격인 본인이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한 국어국문학과의 모습은 ‘말’을

좋아하는 학우와 ‘글’을 좋아하는 학우가 두루 섞여 있는 곳이었다. 또한 문학 외에도 공연, 뮤지컬, 영화,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학우가 많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문지원 학우: 입학 전에는 시나 소설 창작에 관련된 강의가 많을 것 같다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작품과 관련한 논의나 재해석 강의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문학 작품이나 문법만을 심도 있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교육’ 혹은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등 다양한 학문과 관련된 내용을 폭넓게 배우는 강의가 많은 것이 차이점이었다.

기억에 남는 강의가 있다면

김영현 학생회장: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는 최진욱 교수님의 ‘근대소설론’이다. 고등학교 시절 수능 교재로 접했던 근대소설 작품을 대학에서 다시 읽으며 토론문을 작성하는 과정이 새로웠다. 작가의 의도와 문장의 상징적 의미, 여러 해석 가능성을 함께 탐구할 수 있어 이전과는 다른 깊이로 작품을 바라볼 수 있었다.

문지원 학우: 우리나라의 문화를 재해석해 자신

만의 방식으로 콘텐츠화하는 최진욱 교수님의 ‘한국문학과 문화콘텐츠’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시회, 축제, 팝업스토어 등을 기획하며 다양한 분야의 문화에 대해 스스로 해석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창작했다. 이 과정에서 교수님의 구체적인 피드백 덕분에 더욱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었다.

전공 선택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김영현 학생회장: 학우들의 원고를 받아 문집을 제작한 경험이 가장 뜻깊었다. 책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처음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학생회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완성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이름으로 문집이 발행되는 순간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 같아 뿌듯했다.

이정현 학우: 학과 학생회로 활동하던 시기에 진행한 ‘한글날 기념행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한 글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는 취지로 우리 대학 정문에 부스를 열고 한글날 퀴즈와 문학 보물찾기를 진행했다. 행사를 준비하며 한글의 역

사와 의미를 새롭게 배웠고 자부심을 느꼈다.

국어국문학과의 가장 큰 매력은

문지원 학우: 국어국문학과의 가장 큰 매력은 감수성과 낭만이라고 생각한다. 책 읽는 사람과 글 쓰는 사람은 남들과 다른 감성과 해석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낭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국어국문학과의 매력인 것 같다. 인문학적 소양과 철학적 소양은 어느 분야에서든 의미 있게 쓰이는 역량이기 때문에 훗날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이정현 학우: 국어국문학은 감성과 전문성이 공존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형성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국어국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곧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문학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내면과 시대의 숨결을 함께 읽어내고 그 언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얻게 된다. 점점 감성이 메달라가고 소통이 단편화되는 시대에 문학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고 표현을 다듬을 수 있다는 점이 국어국문학의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한다.

국어국문학과의 꿈을 꾸는 이들에게

국어국문학과의 인재상은

김승구 교수: 국어국문학과의 학생들이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소통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교육과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언어문화 전문가로 키워내고자 한다.

국어국문학과의 전과나 복수전공을 고민하는 학우들에게

김승구 교수: 역량이나 자질보다 본인의 관심도가 더 중요하다. 국어국문학에 대해 강한 동기나

관심을 가진 학생이라면 역량이나 자질은 부차적인 문제다. 타고난 자질을 믿고 안주하는 학생보다는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강한 열정을 가진 학생을 원한다.

이정현 학우: 가장 좋은 준비는 많이 읽고 많이 써보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소설도 좋지만 강의에서는 고전 소설이나 현대문학 작품을 자주 다루기 때문에 이를 미리 접해두면 도움이 된다. 또한 책을 읽고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연습을 권한다. 국어국문학과는 감성만큼이나 언어를 다루는 힘이 중요한 학문이므로 읽고 쓰는 연습이 충분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국어국문학과 진학을 꿈꾸는 예비 신입생들에게

김영현 학생회장: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국어국문학과 진학을 꿈꿔 왔고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 국어국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깊이 이해해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한다. 예비 신입생들도 자신이 세운 목표를 믿고 꾸준히 나아가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흔들리고 불안할 때도 있겠지만 좋아하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순간들이 모두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곧 국어국문학과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기를 기대하겠다.

문지원 학우: 대부분의 강의는 학생들이 기본적

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을 권한다. 처음부터 국어국문학과의 꿈을 꾸는 학생이 아니라면 강의에 필요한 배경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 김유정 작가, 윤동주 시인 등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숙지하고 진학하면 본인의 성적과 강의 듣는 것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